

"노동하며 '살아있고자' 투쟁으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리 힘으로 지키자"

✎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2.10.26 19:24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26일 열린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에 맞서 투쟁을 결의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작업중지권 및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산안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26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시작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900명은 서울역 앞 집결 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까지 행진하고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했다.



26일 열린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백승호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9개월이 지났지만, 처벌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없게 끊임없이 흔들고 무력화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결의한 것이다. 서울역 앞 배달 플랫폼 노동자 오토바이 행진으로 시작된 이번 집회대오는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와 경제계, 대형 로펌이 한통속으로 법안을 무력화시켜 법은 '종이호랑이'로 전락 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하면서, "다시는 돈벌이만 앞세운 기업에 희생되는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전 조직적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며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뿐만 아니라 독성 물질에 중독되고 과로사, 폐암으로 병들어 죽는 노동자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SPL 사고 엄정 대응'을 운운하며, 실제로는 시행령 개악 시도로 중대재해 처벌을 무력화하고 있다. 경총 등 경제계는 법의 개악을 요구하고, 대형 로펌은 재판 중인 사건에 위헌 제청신청으로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26일 열린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살고자 이곳에 왔다. 여전히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윤석열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노동자들의 살겠다는 결기마저도 외면하는 정부가 어찌 국민과 소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만들어졌다. 한 해에 2400명의 노동자가 꼬박꼬박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으로 이 법을 만들어냈으니, 우리의 투쟁으로 지켜낼 것이다. 우리가 투쟁해서 죄 있는 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노동자들의 목숨은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26일 열린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이번 SPL평택공장에서 벌어진 산재사망과 연이어 발생하는 SPC그룹 내 산재 사고들에 대해 SPC그룹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고, 홍창의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해마다 늘어나는 배달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는, 라이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만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산재를 언급하며, “또다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고 어제 대구에서 발생한 참사로 우리의 동지가 돌아가셨다.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속도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생명과 안전을 이해한다면, 당장 시행령통치를 중단하라”고 했고,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도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안전인력 확대를 촉구하며 죽지않는 일터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26일 열린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손덕현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투쟁에 노동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 이상 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발언을 끝으로 집회는 마무리됐다. 이후 '윤석열차'를 부수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대오는 집회장소인 '전쟁기념관 앞'까지 가기 위해 삼각지 파출소 인근에서 15분간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맞은 편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500명의 집회가 용인되었지만 경찰이 장소에 도달하기도 전에 진입로를 막고 있었고 이에 항의하며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26일 열린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백승호 기자

경찰은 신고된 인원만 강조하면서 실제적인 이동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이에 더 이상 집회장소 진입이 어렵고 부상이나 이후 사법조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진입 시도 중단하고 결의대회 진행했다.

앞선 오전 11시 민주노총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산재사고를 은폐하고, 현장안전과 기업의 이윤을 맞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라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점점 더 무력하게 하고, 기업 범죄를 오히려 방조하는 시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 뒤 "아직까지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은 경영책임자는 없다. 검찰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현장에 죽음을 안고 사는 노동자들이 참다 참다 대검찰청까지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26일 열린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김준 기자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